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강화 방안

이재계 ·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뒤따랐고,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유인책이 발표되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 제도 보완 사항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일관성있게 이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자료의 영문화 작업을 병행하며, 효과적인 투자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제를 도입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차별화 정책이 요망된다.

기업은 투명 경영을 위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노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핵심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해외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전략적 제휴나 협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 창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머리말

한국의 외환 위기가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IMF, IBRD, ADB 등 국제 기구의 지원 금융과 뉴욕에서의 외평채 조달, 정부의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한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의 추진, 대통령의 해외 투자 유치 노력 등이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해외 투자 자금의 유치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우

코닝社의 직접 투자 유치 실패와 대한중석의 매각 실패의 예에서 보듯이, 제도만 바꾼다고 해외 자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관료, 그리고 기업, 종업원 모두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절박성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언론·교육계·사회 단체로 확산된 국수주의적 태도가 과문을 일으켰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소비 문화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중시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우리가 보여준 것은 고용 조정에 대한 강한 사회적 저항이었다.

복잡하고 자의적인 행정 규제, 관료들의 소관 업무 다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비전문성, 왜곡된 금융 관행과 금융시스템의 혼란, 신뢰성 낮은 기업 현실 등과 더불어 현재의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주해온 정부와 재계의 노력과 최근 외환 보유 및 대외 지불금 규모, 외국인 투자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실천적 노력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 여건의 변화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한 노력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금융 산업 개혁, 기업들의 구조 조정,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같은 개혁 및 제도적 보완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규제 완화이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기구가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된 것은 노사정 타협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조치였다. 그 뒤를 이어 대기업 집단의 기업 구조 조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금융 산업의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1998년 4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 기관 및 기업 구조 조정 방안을 살펴보면,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구조 조정 기금, 주식 투자 기금, 부채 구조 조정 기금 등 3대 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성업공사와 토지공사의 기업 부동산 매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금들은 주로 중

견 및 중소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한 자금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兩 공사의 기능 강화는 부실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대시켜 기업들의 자금 마련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은행 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제2금융권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금융 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 금융 기관 재발 방지를 위한 적시 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인수·합병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관리시

스템을 지원·촉진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토지 취득을 자유화하며,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 각종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고, 조세 감면 확대, 공단 부지 가격 인하 등의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국내 진출시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종목당 주식 투자 한도 철폐 추진, 각종 채권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한도 개선 및 단기 금융 시장의 개방 등 자

〈표 1〉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제 및 추진 내용

과제	담당 기관	추진 일정	추진 내용
<투자환경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외국인 투자 자유화 · 외국인 토지 취득 자유화 · KOTRA 구조 개편 ·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재경부	1998년 상반기	· 규제·관리에서 지원·촉진으로 · 적대적 M&A 허용, 투자 업종 개방 · 토지 취득·관리 관련 법률 개정 · 투자 전담 기구로 개편 · 인허가 간소화
	재경부	1998년 상반기	
	건교부	1998. 5	
	산자부·재경부	1998. 7	
	재경부·지자체	1998년 상반기	
<투자유인제도> · 조세 감면 대상 확대 · 공단 부지 가격 인하	재경부	1998. 4	· 첨단 산업 지원 서비스업 조세 감면 · 조세 감면 기간 연장 · 지방세 감면 대상, 지자체 재량권 확대 · 전용 공단 입주 자격 기준 완화 · 지자체 소유 토지, 지방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재경부	1998년 상반기	
	재경부	1998년 상반기	
	산자부	1998. 4	
		1998년 상반기	

자료: 재정경제부(1998. 4. 8),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종합 대책」.

〈표 2〉 자본 시장 자유화 현황

분야	자유화 내용
주식 시장	· 외국인 종목당 투자 한도 철폐(금년말 계획) · 적대적 M&A 허용(금년중)
채권 시장	· 투자 한도 - 만기 3년 이상 보증 회사채: 인당 10%, 종목당 30% - 중소기업 발생 무보증 회사채: 한도없음 - CB 포함 무보증 회사채 총투자 한도: 50% - 만기 3년 이내 국채, 금융채, 회사채: 한도없음
단기 금융 시장	·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한도없이 개방됨 · CD, 표지어음, 환매채, 자발어음: 금년말 개방, 한도없음

자료: 전경련(1998. 3. 20), 「대외 개방과 역차별적 규제」.

본 시장의 자유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보유액 및 대외 지불금 규모 추이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국제 기구에서 약속한 지원 자금이 계획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행한 외평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성사되는 등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1월 말의 72.6억 달러에서 올해 3월말 현재 241.1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400억 달러의 외환 보

그러나 1998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 규모는 연이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1997년말 외환 위기를 맞았던 시점의 1,544억 달러보다 다소 낮은 1,503억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 외채의 비중이 1997년의 44.3%에서 1998년 2월말 현재 40.8%로 줄어들었고,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의 대외 지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외채의 구조가 다소 변화된 특징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외채 규모에서 연 10%선의 금

〈표 3〉 외환 보유액 추이

구분	(단위: 억 달러)						
	1996년말	1997년 10월말	1997년 11월말	1997년 12월말	1998년 1월말	1998년 2월말	1998년 3월말
외환 보유액(A)	332.4	305.1	244.0	204.1	235.2	267.2	297.5
해외 점포 예치금(B)	38.2	80.1	169.4	113.3	109.5	79.8	54.0
기타(C)	-	2.0	2.0	2.0	2.0	2.0	2.0
A-(B+C)	294.2	223.0	72.6	88.7	123.6	185.4	241.5

자료: 재정경제부(1998. 4), 「1998년 3월말 외환 보유고」.

〈표 4〉 총대의 지불 부담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		1998. 2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외채	1,575	100.0	1,544	100.0	1,512	100.0	1,503	100.0	
기간별	장기 외채	575	36.5	860	55.7	872	57.7	889	59.2
	단기 외채	1,000	63.5	684	44.3	640	42.3	614	40.8
부문별	국내 금융 기관	1,035	65.7	752	48.7	717	47.4	712	47.3
	민간 부문	356	22.6	422	27.3	406	26.9	391	26.0
	공공부문	24	1.5	181	11.7	211	14.0	230	15.3
	외은 지점	160	10.2	189	12.2	178	11.8	170	11.3

자료: 재정경제부(1998. 3), 「대외 지불 부담 현황」.

리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이자만 갚기 위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외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외채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결국, 가능한 외자 유치 방법을 총동원하여 부채의 절대 규모를 낮춰야만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평가

올해 들어 1998년 2월말 현재 직접 및 간접 투자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금은 28억 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88.6%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4%인 3.2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포트폴리오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자금이다.

새로운 투자 유인책이 본격화되기 이전

〈표 5〉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2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¹⁾	13.2	19.4	32.0	69.7	3.2
포트폴리오					
등록 금액	33.6	42.9	52.9	65.1	71.8
투자 ²⁾					
순유입 금액	19.1	24.3	46.5	7.6	24.8
총유입 금액	32.3	43.7	78.5	77.3	28.0

주: 1) 재정경제부(1998. 3), 「국제 투자 및 기술 도입 동향」에 의거 작성.

2) 증권거래소(1998. 3), 「외국인 투자 동향」에 의거 작성.

인 1998년 1월중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86 건으로 건수로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으나, 금액으로는 85.1% 감소한 1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가 없었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월 이후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천명과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한마디로, 외국인들의 “더 좋은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Wait & See)”는 전략때문이다. 직접 투자 부문의 경우, 국내 내수 시장을 겨냥한 판매망 구축과 일본이나 중국 시장의 교두보로서의 생산 기지 확보 등 투자의 유인 기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우량 기업의 인수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더 좋은 협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호적 M&A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해서라도 해외 자금을 유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M&A가 활성화 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IMF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 및 기업 매매 시장의 미활성화,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차입 인수(LBO) 방식의 M&A 자금 조달도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외전환사채나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벗어나, 자사 지분이나 부채를 제외한 자산 매각, 합작사로부터의 담보부 자금 조달, 새로운 합작 사업이나 전략적 제휴, 우호적 M&A를 통해 주식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기업에서 성과를 얻었을 뿐 아직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 투자 부문에서도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해외 자금 유입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초우량주를 중심으로 주식 매입이 이루어져 1998년 2월까지의 외국인 매수액 가운데 7대 대형 우량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유치 여건 강화 방안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기업이 국익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음 사항에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정부 부문

지금까지 제도적인 개선 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이 총망라되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추진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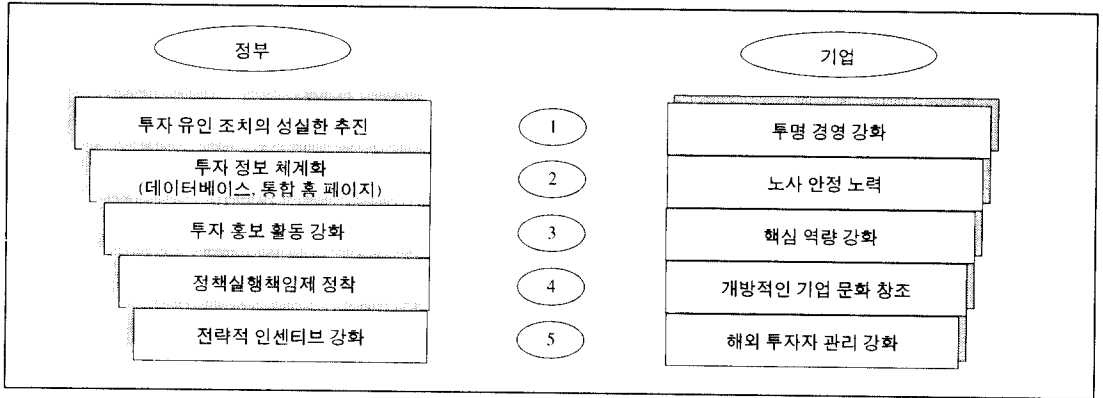
첫째,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동안의 투자 유인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에게 외국 자본의 유입이 중요한 외환 위기의 타개책임은 분명하지만,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소관 부처별로 너도나도 자기 일이라고 주장하고 성급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상대방은 더 좋은 조건을 위해 기다릴 것이 분명하다. 외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급할 것이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 제도 보완 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인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현재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가 대단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영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알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급한 과제이다. 데이터 베이스의 내용은 동남아의 주요국과 비교한 투자 상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의 비교 분석한 내용들도 포함시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우선 지금과 같이 정부의 소관 부처별 따로, 민간 기업들 따로 식의 해외 투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탄식으로 접근할 경우 동일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도

〈그림〉 해외 투자 유치 여건 강화 방안



있고, 자칫 우리의 긴박함이 역으로 투자자들의 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정부와 민간 기업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해외 자금 유치의 가능성이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관성있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업무의 주체와 지원 부서를 일원화하고 대외 접촉 창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 업무를 집행하는 소관 부처의 정책 실행에 관한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결정과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료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강화시켜 소신있는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 가운데서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투자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M&A를 통한 외자 유치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신규 사업 진출, 제조업 투자 진출 등에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 기업 부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정책 조치에 만족한 해외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신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

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가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자 여건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투명 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불명확한 회계 기준이나 기존의 사업 관행을 유지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노사 안정에 역점을 두는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 IMF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노사 안정은 필수 전제 조건이다. 만약 노사 안정 기틀이 허물어지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대하기 힘들며, 경제 희생 또한 그만큼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셋째,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연구 개발(R&D) 투자 감소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나 공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개방적인 기업 문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우리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보다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해외의 전문 경영인을 유치해서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와 같은 경영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있어야 적응할 수 있다.

다섯째,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과 정부의 해외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 수집은 물론, 필요시 더 좋은 조건으로 해외 기업과의 공동 사업이나 전략적 제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